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4
----------	------

발의연월일 : 2024. 9. 24.

발 의 자 : 신장식 · 김준형 · 박은정
서왕진 · 황운하 · 조 국
김선민 · 김재원 · 강경숙
차규근 · 정춘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행위를 저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특히 일부 업체들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용역을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기존의 전통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고 미국, EU 등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회

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공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 등의 검색·중개·이용·거래·교환·광고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각 연간 매출규모, 연간 및 월간 활성이용자 수, 기업결합의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 등의 검색·중개·이용·거래·교환·광고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제5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는 그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명 이상일 것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일 것

제6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제18조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지정 유지 여부 검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목록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제8조(자사우대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서 검색노출 순위, 평점, 리뷰, 이미지, 할인혜택, 결제방식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표시를 통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비공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끼워팔기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이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부하여 제공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조(멀티호밍 제한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적 지위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각종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그 이동 및 접근 등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공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최혜대우 요구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서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쟁제한성의 추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시의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서비스로서 특정한 유사 서비스의 이용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3. 검색순위, 노출순위,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 자료 및 표시 기준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정리·분석·이용하는 정보 및 그 수집·정리·분석·이용의 목적 및 조건
5.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 정보 및 제공의 조건·방법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상담, 협의 등의 요청·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7. 그 밖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 조건 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기업결합 신고) 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이하 이 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2.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각 연간 매출규모
3.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핵심 플랫폼서비스별 연간 매출규모
4.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핵심 플랫폼서비스별 연간 및 월간 활성이용자 수
5. 기업결합의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현황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정보공시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기재 사항, 그 밖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장조사

제18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최종 결정의 내용 및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조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조사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장조사의 개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조사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개시결정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시장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위반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재발 방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

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제29조(금지청구) 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